

데스크 시국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국 부국장

“보고 싶더라도 이번 설 명절만큼은 멈춰 주세요.” “코로나 극복 원년, 회복되기를, 행복하기를, 힘내기를, 요즘 광주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띄는 현수막 문구이다. 광고 카피처럼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다. 대부분 설 명절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가요 제목을 패러디한 ‘별호자는 읍니다’라는 문구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발생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맞는 설 명절은 그동안 당연시 해 온 ‘귀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지난 추석 때 이미 겪은바 있지만 코로나 속 명절 쇠기가 곤혹스러운 것은 변함이 없다.

‘이번 명절은 집에서’ 캠페인

정부는 설 명절 연휴 기간(11-14일)동안 직계 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추모 공원과 봉안 시설

은펜칼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1년 전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중국 우한이 폐쇄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이 첫 코로나 환자로 확진되었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들이 있었고 중국인의 국내 유입을 막지 않는 상태에서의 방역은 창문 열고 모기가 뿌리는 것과 같다는 조동 석인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우한 시민들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탈출한 상태였다. 전염병 연구로 유명한 역사학자 프랭크 스노든은 ‘전염병은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플라레는 19세기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공장 그 주변에 형성된 인구 밀집 도시의 비위생적인 시설과 하수를 통해 확산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일일생활권, 단일 생활권이 된 지구의 세계화 틈바구니를 비집고 이동하여 단기간에 아시아에서 유럽과 남미까지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었다.

국가 간 입국 제한과 국가 안의 방역으로 온 힘을 다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설 풍속도

도 폐쇄한다. 아직 3차 유행이 진행 중이어서 언제든 전국적인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며칠 전 서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설 명절에 앞서 고향을 방문했다가 친척 한 명을 감염시켰고, 그 친척이 다시 여러 재을 주민을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설 명절은 집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갤럽이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설에 1박 이상 고향 방문이나 여행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는 ‘1박 이상 집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12%는 ‘고향 방문만’, 1%는 ‘여행만’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부의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귀성을 하는 편법을 쓰겠다는 이들도 있다. 일명 ‘쪼개기 귀성’, ‘릴레이 귀성’이다. 가족들끼리 귀성 날짜를 조율해 나흘간의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돌아가며 하루에 한 식구씩 모이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견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면서 바뀌는 명절 신(新) 풍속도가 눈길을 끈다. 온라인 화상 세배나 차례·성모, 모바일 세뱃돈, 간편 채수 음식 마련, 온라인돌 선물 발송 등이다. 디지털 문화와 택배 문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이런 방식이 2021년 설 명절의 ‘뉴 노멀’(New Normal)인 셈이다.

“이 날은 우리 조선의 다수 동포가 ‘애설’이라고 설 명절인 체도 아니 하는 날이다. 법률의 힘과 관습의 힘

의 조흔(좋은) 대조다.” (동아일보 1924년 1월 1일) 양력이 도입된 지 125년이 됐지만 설은 달을 기준으로 삼는 음력 정월 초하루를 쓴다. 일제강점기에 신정(新正·양력 1월 1일) 쇠기를 강요당했지만 조선인들은 신정을 ‘애설’ 또는 ‘개설’이라며 비하했고, 몰래 구정(舊正)을 쇠었다. 신정을 앞세운 이런 정책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부터 구정을 공휴일로 정해 제대로 설 수 있었다.

막막한 앞길 헤치며 새 길로

‘뉴 노멀’ 설 풍속도는 기존의 관습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는 방식 또한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 정해진 해답은 없다. 경직된 사고, 뻗속까지 뻗 관습과 결별해야 한다. 막막한 앞길을 헤쳐 나가면서 새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주제는 ‘나’이고 ‘우리’다. 정신과 의사인 문요한 작가는 지난 1월 월간 ‘예향’과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한 방법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심리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하고,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주력하고, 잘 안되면 궤도나 방법을 수정해서 재시도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즉흥적인 문제 해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보다 유연해져야 합니다.” /song@kwangju.co.kr

‘코로나 백신’의 공정한 분배와 접종

해 바티는 동안 지구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였던 과학 기술로 미완의 백신을 개발하였다. 백신은 mRNA 백신, DNA 백신,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바이러스 무력화 백신이 있다. 백신의 예방 효과가 완전하지 않고 유통·보관·접종의 용이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이 또한 지구의 세계화를 이끌었던 과학기술의 한계로 받아들여야 한다. 개발된 백신 중 바이러스 무력화 백신이 가장 부작용이 많아 국민 접종 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백신은 개발 단계부터 국가 사회 공동체의 희생과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당연히 공공재로서 기능을 해야 하며 식량·무기·에너지 자원처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구매 공동 프로젝트’(COVEX facility)로 인종·성별·나이 등과 상관없는 백신의 공평 분배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국가들의 사재기와 다국적 제약 회사의 이익 추구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백신 구매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백신을 준비 하였다. 백신의 유통·보관·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구매 국가가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로 준비가 늦어졌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로 다국적 제약사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백신 확보와 분배를 세계보건기구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지만 공정한 배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백신의 접종 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 중증으로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 체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했다. 먼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요양시설의 고위험군 환자, 중증 환자가 많은 병원의 의료진과 코로나 환자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부터 시작하여 전 국민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나 백신 도입 일정과 물량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백신의 개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방역’만이 아니라 ‘예방’의 영역이 추가되었다. 좀 더 복잡해졌다. 앞으로 치료제가 개발되면 ‘치료’의 영역이 더 추가될 것이다. 또한 집단 면역을 위해 독감 백신처럼 매년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1년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만 빼앗은 것이 아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계도 빼앗았다. 불거피한 방역 조치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힘들어졌는지 여러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바뀐 일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견들도 있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이유든 백신의 의학적·사회적 순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뀐 일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불평등 바이러스’를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한 첫 단추는 백신의 공정한 분배와 접종이다.

기고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태공원, 신안 섬들의 미래



조은정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스페인 발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성공 이후 미술관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최고의 문화 상품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시들마다 앞다투어 미술관을 건립하고 도시 재생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면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린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서서 지역 미술관들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점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학계와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 휴식의 장소로서 미술관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안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도 1뮤지엄 프로젝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사업은 군내 섬들에 24개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대규모 야외 조각공원을 포괄하는 현대 미술관으로부터 노후된 마을회관과 폐교를 활용한 일상의 작은 미술관,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성격이 다양하다. 특히 ‘대마불사’(大馬不死) 전략으로 블루버스터급 미술관에

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군내 2개 읍 12개 면을 넓게 포괄하도록 크고 작은 뮤지엄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신안군은 이와 더불어 17개 섬에 각각의 자연생태 환경을 살려서 특성화된 정원을 조성하는 ‘국가 섬 정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퍼플섬’으로 세간의 화제가 된 반월·박지도나, 분재 공원과 미술관 전시를 연계해서 동백꽃 축제를 연 압해도의 사례는 신안군의 정원 사업과 ‘1도 1뮤지엄’ 프로젝트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도 1뮤지엄’과 ‘국가 섬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안군 12개 면 전체에 풀뿌리나 모세혈관처럼 넓게 퍼지는 문화예술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지정된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통편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활성화’는 관광객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문화적·생태적 가치에 대한 주민들과 방문객들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통한 지역 사회의 성장이다. 문화는 관광객이기에 전에 먼저 지역주민들이 영위해 온 삶의 방식이자 마음의 교류로서, 지역 사회를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community)로 묶어주는 끈이다. 즉 거기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신안군은 반월·박지도의 보라색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원추리꽃과 맨드라미의 섬인 흥도와 병풍도는 주홍, 수선화의 섬인 선도는 노랑, 해당화와 수국의 섬인 비금도와 도초도는 코발트블루를 섬의 상징색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징색들은 각 섬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주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퍼플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반월·박지도는 원래 도라지를 많이 재배해서 보라색이 자연환경의 중요한 일부였던 곳이었다. 이러한 친숙한 환경을 더욱 북돋우기 위해서 라벤더와 국화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 지붕과 산책로, 다리 등을 보라색으로 정비한 것이다. 특성화된 마을 풍경이 국내외에 회자되고 온-오프라인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했던 마을들이 활기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유산을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즐기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현재 신안군이 추진 중인 자은도 ‘군립 미술관’과 안좌도 ‘떠있는 미술관’ 역시 남도의 광활한 바다 풍광과 어우러진 공간 체험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서 지역 예술가들과 세계적 예술가들 사이의 인적 교류를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는다면, 광주·목포·신안을 연결하는 문화예술산업 고도화의 축이 완성될 것이다. 신안군과 주민들이 구축하는 문화생태공원과 뮤지엄 네트워크가 호남 문화권역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무등산 난개발 방지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광주 신양파크호텔 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 이후 무등산 공유회 운동이 다시 일고 있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간 정착협의회는 최근 광주시에 낸 건의서를 통해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연립주택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유회 및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981년 장원봉 인근에 3성급 호텔로 문을 연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말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호텔 부지를 포함한 2만5천800㎡에 지하 3층 지상 4층 6개 동 80여 세대의 고급 빌라 신축이 추진됐으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표고 100m 이상 토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엇그제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는 공동주택을 못 짓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표고 100m 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거쳐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독주택 건립만 가능하다.

광주시의 조례 개정으로 무등산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3월1일 공포돼 한 달 후인 4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지역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무등산 신앙개울 신축 반대 시민연대는 “시행 시기를 유예해 업자에게 건축·개발 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하겠다.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난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광주시의 의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미 접수된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심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더 이상 무등산이 부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 주도형 도시’로 바뀌는 광주 기대된다

‘정치 1번지’로 불렸던 광주시가 ‘경제 주도형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중심 디지털 뉴딜과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토대로 한 휴먼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이 그 동력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이다. 엇그제 열린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NHN은 2100억 원을 투자해 광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는 ‘국가 AI 융복합단지’를 첨단 3지구에 조성, 광주를 대한민국 최고의 AI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2045년까지 외부에서 전력 에너지 공급받지 않는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로 자리 잡는 게 최종 목표다. 이는 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 시기로 설정한

2050년보다 5년이나 앞선 것이다.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축으로 한 휴먼 뉴딜은 올해 당장 결실이 기대되는 분야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은 오는 9월 준공돼 연간 10만 대의 경형 SUV를 생산하게 된다.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신입사원 공채가 한창인데 지난달 186명의 기술직 모집에는 무려 1만 2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해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 등지로 ‘취업 유랑’을 떠나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광주형 3대 뉴딜’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한 지역 산업구조와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시는 ‘경제 도시 광주’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국보와 보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늘 세간의 관심사였다. 1962년 국가지정문화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국보는 334호, 보물은 2110호까지 지정됐다. 이 가운데 자적 논란이 일거나 가짜로 판명돼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도 종종 나왔다.

국보가 지위를 잃으면 그 번호를 영구 결번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3건 있었다. 19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귀함발할자총통’은 거북선에 장착된 화기로 알려지면서 국보 제274호로 지정됐

지만, 4년 만에 지위를 잃었다. 이충무공 해전 유물발굴단장이 가짜 총통에 화공약품을 부어 강제로 부식시켰다고 고백하면서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보나 보물 지정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지정 예고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외국에서 제작된 유물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 1936년 순기정 선수가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기념으로 받은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가 대표적이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에서 제작된 투구로 우승 부상으로 주어졌지만 손

기정에게 전달되지 않고 베를린박물관에 보관됐던 것을, 그리스의 한 신문사 주선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이 투구는 국내에서 보물 제904호로 지정됐다.

국보 1호 승례문은 자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제가 1934년 승례문을 조선의 보물 1호로 지정한 것을 그대로 국보1호로 지정한 것인데,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한양으로 입성한 문이어서 더욱 논란이 됐다. 특히 2005년 감사원은 승례문의 ‘상징성 부족’을 이유로 문화재청에 국보1호

교체를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이 국보1호로

적합하며 논란이 불을 지웠다. 지난해 10월에는 전용기 의원이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냈다.

결국 문화재청이 60년 만에 문화재 지정번호를 없애기로 했다.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보 1호 승례문이 아니라 그날 국보 승례문으로 표기하게 된다. 가치를 번호로 평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환영할 일이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